

전동용 회장, 전국 순회 간담회 가져

— 9개도에서 연인원 6백여명 참석 대성황 —

취재 : 김 동 성

양돈농가 — 양돈업 등록제 폐지 · 축협계열화
사업 중지 등 강력 요구

양돈협회 —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 적극 해결

대한양돈협회 전동용 회장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9개 도를 순회하며 양돈농가들과 직접 대화를 갖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9월 1일 강원도(춘천 어린이회관)를 시발로 2일 충남(대전 대림호텔), 3일 전북(전주 신성예식장), 4일 전남(광주 카톨릭센터), 5일 경남(마산 크리스탈 호텔), 6일 경북(대구 동인호텔), 8일 경기(수원 단위농협 회의실), 11일 제주(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14일 충북(청주 축협회의실) 순으로 이루어진 이번 순회 간담회에는 중앙회에서 전동용 회장과 한백용 전무이사, 김국진 홍보부장이 참석했고, 각 도에서는 도협의회장, 각 지부장, 회원 등 연인원 6백여명의 양돈농가가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양돈농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이를

집약하여 회무에 반영하고, 관계당국·국회·관련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특히 오는 12월께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에게 협회의 의견을 제시, 이를 공약화 하도록 함으로써 양돈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각도협의회회장의 주관으로 △국민의례 △도협의회회장 인사 △중앙회 회장 인사 △협회의 주요 활동 및 현황 보고 △양돈업계 현안문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10년간 양돈산업은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용 회장은 「이 모임은 전국의 양돈동지들과 함께 양돈산업을 걱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히고, 「양돈인들은 같은 배



▲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전동용 회장

를 탄 공동운명체이므로 산업발전을 위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동용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협회에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동용 회장의 인사가 끝난 후, 한백용 전무이사는 참석자들에게 협회의 현황과 협회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 협회가 벌인 주요활동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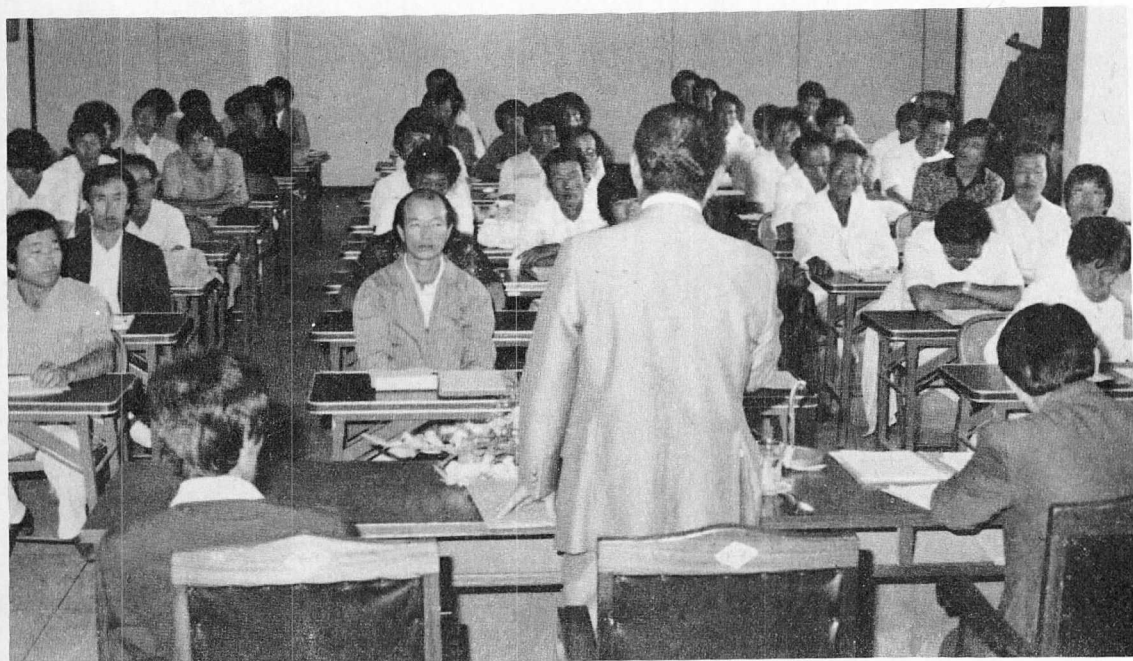
이어 진행된 양돈현안문제 대책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생산·유통·소비 등 분야에 걸쳐 현행 양돈업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고도 허심탄회한 토의를 벌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양돈업계의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정부의 양돈

업 등록제·허가제의 운영 문제점 △축협 계열화 사업 문제점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 자유화 문제점 등에 관해 불만을 나타내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들 3개 사항은 전국의 9개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문제점으로 제기돼 양돈업계의 주요 현안문제임을 입증해 주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양돈업의 등록제·허가제와 관련, 정부의 양돈업 등록제 시행후 오히려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었고 제도시행에 따른 민과 관의 갈등 심화로 인해 생산활동에 위축을 가져오는 등 정부가 당초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운영한다며 이의 폐지를 강력히 건의했다. (그러나 일부 도에서는 등록하한선을 모든 20두까지 인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또 양돈농가들은 양돈업 허가제의 운영에 있어 정부가 「돈육 수출」, 「계열화사업」 「중도 등록」 등 예외조항을 두어 대기업을 보호한다



▲ 간담회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의 진지한 모습

고 주장하고, 이와같은 예외조항을 완전 철폐해 허가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1천두 이상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앞으로 양돈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돈협회의 동의를 받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양돈농가들은 축협의 돼지계열화 사업 시행과 관련, 「축협은 조합원들과 경쟁이 되는 비육돈 생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개별농가가 할 수 없는 유통구조개선과 가공분야 등을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는 조합탈퇴와 사료불매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참석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 자유화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최근 1 덴마크 튜립사의 돼지고기 통조림 제품을 수입한 해태상사를 비롯한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업체에 대한 관련제품 불매운동을 전

개하는 한편, 수입중지 등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력 행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양돈농가들은 사료곡물 수입시에 고율의 관세·부가세를 부담하는 우리나라 양돈농가들이 관세·부가세가 없고 수출 장려금까지 지급하는 외국과 경쟁해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최소한 외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세·부가세를 (사료 수입시) 전면 감면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양돈농가들은 자조금제도의 조속한 시행 △축사 신·중축 규제 완화(또는 법엄격 집행) △법정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인상(기존 80%를 100%로) △돼지고기 수출업체에 금융지원 △수출규격돈 확보와 소비확대를 위해 수돼지 거세 전면 실시 △돼지 부산물 공개경쟁입찰 시행 △등급제도

양돈농가들의 주요 건의 사항

- 양돈업 등록제 폐지 (법 개정전까지는 현실화)
- 양돈업 허가두수 예외규정 철폐
- 축협 돼지 계열화 사업 시행 중지
-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 자유화 유보
- 사료곡물 수입시 관세·부가세 전면 면제
- 돼지고기 연동가격제 철저 이행
- 협회 차원의 배합사료 품질검사 시행

시행 △도축장 시설 현대화 △박피제도 전국 확대실시 △사료회사들의 돼지 사육 규제 △협회 차원에서의 시중 배합사료 품질검사 실시 및 결과 홍보 △돼지고기 연동가격제 철저히 이행 △계획출하의 제도화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에 따른 모델 개발 보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정부 융자금 지원 △중돈·돼지 정액 등 수입 협회가 주관 △돈육소비홍보사업 적극 추진 △기업양돈장의 분산소유 실태 파악·대책 수립 △남부지방에 검정소 설립 △검정돈 경매시 상한선 신설 등을 요구했다.

전동용 회장은 양돈농가들의 이와같은 건의에 대해 「양돈업의 등록·허가제도를 비롯한 축협의 돼지 계열화사업,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 자유화 문제 등은 협회내에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개선방안과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용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양돈산업 발전 차원에서 협회가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관계당국과도 협의해 적극 해결토록 하



▲ 간담회에 앞서 제주지부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전동용 회장

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순회 간담회에는 전국의 각 도와 축협, 양돈조합, 사료·동물약품업체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았으며, KBS 지방방송국과 강원일보 등 지방 신문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취재·보도하였다.

본회는 이번 간담회가 많은 양돈농가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진행되었고, 또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훌륭한 안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이와같은 행사를 매년 정례화 할 계획이다.*